

부문별 주요기사

— 대내경제	61
— 농업 및 식량	65
— 대외경제	68
— 남북경협	72

부문별 주요기사(3.1~3.29)

대내경제	61
「민주조선」, “북한 전역에 3G 이동 통신망 구축”	61
라선시 감시 강화	61
탈북자 가족 송금 단속 강화	62
내달 7인 최고인민회의 개최	62
올해도 아리랑 공연 개최	62
경제활동참가율 70%	63
3월 중 환율 오르고 쌀값은 내려	63
FAO-OIE, “북, 구제역 계속 확산”	63
농업 및 식량	65
북 군인, 주민보다 더 굶주려	65
북 주민 37%, 외부 식량지원 의존	65
북, 중국에서 식량 확보에 안간힘	66
FAO, “북, 올 곡물수확량 소폭 감소 예상”	66
유엔, 국제사회에 “식량 43만톤 지원권고”	66
북, 대중 곡물·비료 수입 전년 대비 크게 감소	67
대외경제	68
북, 대중수출 급증	68
FATF, 대북금융제재 강화 성명 채택	68
중 투먼시, 올해 라진·청진 항로 개통	69
북, 탄소배출권 판매추진	69
라선시 부위원장, 중 지린서 경험 논의	70
북, 대EU수출 전년대비 2배 성장	70
지린성, 동남아·변경지역 국제상품투자협력 전람회 추진	70

남북경협	72
개성공단 월 생산액 3천만달러 회복	72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첫 지급	72
지난해 남북교역, 북중교역 절반 수준	73
북 주민 27명, 남하 50일만에 송환	73
방미 북 대표단, “경협 가능성 찾으러 왔다”	73
국민 63%, 대북 쌀 지원 반대	74
남북 전문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협의	74

대내경제

「민주조선」, “북한 전역에 3G 이동 통신망 구축”

3월 4일 「연합뉴스」는 일본 「교도통신」이 「민주조선」을 인용하여, 북한 전역에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된 제3세대 이동 통신(3G)망이 구축되었으며, 이번 3G 통신망의 구축으로 위성통신 설비의 디지털화가 실현됐다고 보도했다고 전함. 또한 「교도통신」은 「민주조선」을 인용, TV의 위성중계와 전화교환기 설비 등의 디지털화 덕분에 통신데이터 송신이 고속화 및 대용량됨으로써 원격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높은 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하였으며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여, “전화 교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자동교환 능력이 20배로 확충돼 지방의 농촌까지 자동교환식 전화가 설치되게 됐다”고 전함.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3G 휴대전화는 이집트 대형 통신업체 오라스콤과 협력하면서 급속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북한 내부용 이동 통신망인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4).

라선시 감시 강화

3월 13일 「연합뉴스」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하여,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민주화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라선특별시를 오가는 중국인 사업가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고 보도.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내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라선시를 방문한 중국인 사업가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외에는 일절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이 지역을 드나드는 사람 및 차량 검열도 강도 높게 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단속도 강화해 휴대전화 소지자와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을 색출하는 등 분위기가 삼엄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13).

탈북자 가족 송금 단속 강화

3월 18일 「연합뉴스」는 미국 동부 지역에 정착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하여, “북중 국경을 통해 탈북자 가족들이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국경지방에서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 단속이 강화됐다” 고 전함.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국경지역의 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국경을 봉쇄하는 보위부 10호 초소에서도 외화단속이 강화” 됐다고 전함. 이와 관련해 한 고위 탈북자는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된 돈이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결국 암경제가 커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북한이 통제하려고 할 것” 이라고 전했으며, “최근 북한의 경제난으로 살기 어려워진 보안기관원들이 외화를 뜯어내기 위해 외화 단속을 강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18).

내달 7인 최고인민회의 개최

3월 18일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가 내달 7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의 안건을 밝히지 않았지만 매년 3~4월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편성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예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번 회의는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의 조직·인사 정비, 작년 9.28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임된 후계자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선임 여부,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해임된 가운데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이끌 내각 개편이 이뤄질지 등이 주목되는 내용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18).

올해도 아리랑 공연 개최

3월 18일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세계 기네스 기록집(기네스북)에 등록된 세계적인 걸작품인 ‘아리랑’ 이 계속 진행된다” 며 “올해 조선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 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함. ‘아리랑’ 공연은 올해 7회째 맞이하는 공연으로, 연 인원 10만명이 동원돼 1시간 20분동안 진행되는 세계 최대 집단체조로 구성

되며, 북한은 ‘아리랑’ 공연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18).

경제활동참가율 70%

3월 22일 「연합뉴스」는 통계청이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북한의 인구와 경제활동, 가구 및 주택 현황을 소개했다고 전함.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2%로 남한보다 높은 하지만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3%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시기가 남한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가동은 3.5%로 남한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사용하는 난방연료는 석탄 47.1%, 나무 45.1%로, 남한의 가스보일러 50.6%, 기름보일러 25.7%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2).

3월 중 환율 오르고 쌀값은 내려

3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월초에서 3월 23일 현재까지 중국 인민폐 대 북한 돈 환율이 380:1에서 410:1까지 상승하는 동안 식량가격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소폭 상승하여, 사실상 식량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보도.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의 환율대로라면 쌀 1kg당 가격이 1,900원까지는 올라가야 정상이나, 현재 북한 당국으로부터 식량공급을 받는 군부와 간부계층들의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4월 중순부터는 내륙지대에서 시금치와 같은 채소들과 산나물을 채집해서 먹기 때문에 당분간 쌀값이 오르는 힘들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밝혔다(「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3).

FAO · OIE, “북, 구제역 계속 확산”

3월 28일 「미국의소리(VOA)」는 북한 당국이 세계식량계획(FAO)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보도. 국제기구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확산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식량계획(FAO)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북한 당국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

미국의소리(VOA)」는 전함. 세계식량계획(FAO)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지난달 28일부터 9일간 북한 현지에서 구제역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확산을 막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했으며, 지난 24일에는 북한에 지원할 구제역 백신과 장비 확보와 인력 훈련을 위해 1백만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으나 아직 대북 구제역 지원과 관련한 기부를 받지 못하였으며 향후 북한에 지원할 백신의 종류를 결정하고 구매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함. 한편 북한 농업성은 지난달 21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18일 평안북도 태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으며, 이후 1월말까지 북한 전역의 135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해 돼지 1만267마리, 소 1,135마리, 염소 171마리가 감염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전함(「미국의소리(VOA)」, 3.28).

농업 및 식량

북 군인, 주민보다 더 굶주려

3월 7일 「연합뉴스」는 대북매체인 「열린북한방송」을 인용하여, 최근 북한에서는 장마당 경제를 활용하는 주민보다 배급에 의존하는 군인이 더 굶주리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는 「열린북한방송」의 ‘대북식량지원이 북한 사회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브리핑에 따르면, 군인들은 세끼를 다 배급받지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함. 이에 대해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는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에 대한 불만을 달래기 위해 군량미를 적게 걷는데다 체제보위를 위해 배급 대상인 군병력을 늘리면서 최근엔 시장에 의존하는 주민보다 배급에 의존하는 군대의 식량 부족이 더 심각해졌다”며 “북한이 해외에서 식량지원을 받기에 충력을 기울이는 목적은 군량미 보충과 추가 도발 이후의 국제적 제재 대비”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7).

북 주민 37%, 외부 식량지원 의존

3월 8일 「연합뉴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 주민의 37%가 외부의 식량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함. 이 방송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7일 내놓은 ‘2011 인도주의 활동보고서’를 인용하여 국제적 대북 식량지원의 감소로 식량난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37%가 외부 사회의 식량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자연재해와 식량난을 겪은 북한 주민의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올해 대북사업 예산이 미화 1,200만달러로 늘어나 올해 440만명의 어린이와 산모 등을 지원하는 등 사업 지역 및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8).

북, 중국에서 식량 확보에 안간힘

3월 22일 「연합뉴스」는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중국에서 식량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의하면 북한이 해외 공관에 할당량을 배정하여 식량 확보에 나서도록 지시했으며 북한 총영사관은 중국 동북 3성 정부에서 각각 1천톤씩 지원받았으며 추가 식량 확보를 위해 중국내 조선족 기업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또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말 세계 40개국 재외 공관에 할당량을 배정하여, 각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으며 영국 외무부도 북한 대사관이 영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22).

FAO, “북, 올 곡물수확량 소폭 감소 예상”

3월 22일 「연합뉴스」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을 인용하여, 북한이 지난 겨울 심각한 한파에 따른 이모작 작물의 냉해 피해로 올해 수확량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 「미국의소리(VOA)」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에서 실시한 작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국가보고서: 북한’을 인용하여 겨울밀과 감자 등 봄철 이모작 작물 수확 전망이 나빠 올해 식량 생산량이 약간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2).

유엔, 국제사회에 “식량 43만톤 지원권고”

3월 25일 「연합뉴스」는 유엔이 대북 식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 주민 600만명 이상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엔은 국제사회에 43만톤의 대북 식량지원을 권고했고,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도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은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 유엔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 까지 실시한 북한에 대한 식량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여름철 홍수와 혹독한 겨울 등 일련의 충격파들이 북한을 식량위기에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계층이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고, 5월부터 7월 사이인 ‘식량부족기(lean season)’가 시작될 무렵 북한의 식량이 바닥날 전망이라

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5).

북, 대중 곡물·비료 수입 전년 대비 크게 감소

3월 29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올해 1월과 2월 두달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2.4% 줄었다고 보도.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부원장은 2월 중 북한의 곡물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북한보다는 중국의 사정이 더 작용한 결과일 수 있으며 북한의 외환부족이 원인이 아닌 중국이 수출할 곡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부원장은 중국의 곡물 사정이 불안정해서 회사들이 수출허가증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1월과 2월 두달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합계는 전년도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6월에 수확 예정인 이모작 작물의 작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9).

대외경제

북, 대중수출 급증

3월 5일 「연합뉴스」는 「미국의소리(VOA)」 보도를 인용하여 지난 1월 북한의 대중수출이 지난해 동기의 3.5배로 늘고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배를 기록하는 등 북중간 교역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 “올해 1월 북중간 교역액은 지난해 1월의 2.3배로 지난해 1~2월 두달간 교역액 합계보다도 많다” 며 “특히 북한의 대중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고 분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5).

FATF, 대북금융제재 강화 성명 채택

3월 6일 「연합뉴스」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이란과 같은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였다고 보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주(駐)OECD 한국대표부에 의하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지난달 25일 열린 총회에서 대북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 에서 이란과 같은 수준인 ‘대응 조치’ 로 높이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에 대해 OECD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월 처음으로 FATF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으나 이후 자금세탁 관련제도의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 “그래서 이번 FATF 총회에서 대북 금융제재 강화 성명서도 아무런 반대 없이 통과됐다” 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6).

중 투먼시, 올해 라진·청진 항로 개통

3월 7일 「연합뉴스」는 「연변인터넷방송」과 김기덕 투먼시 서기간의 인터뷰 보도를 인용하여 “투먼시가 올해 청진항과 라진항을 이용한 해상 항로를 개통하기로 했다” 고 보도. 김 서기는 “올해 투먼시의 지역내 총생산액(GRDP)을 31억위안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대외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며 “북한으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항 3, 4호 부두를 이용, 남방으로 물자를 운송하는 해상 항로를 연내에 개통하겠다고 밝혔으며, 투먼-라진항을 잇는 해상 항로도 올해부터 운항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7).

북, 탄소배출권 판매추진

3월 11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수력발전소를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부족한 외화를 충당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고 보도. 또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부족해진 외화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수력발전소 사업을 유엔에 등록한 뒤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11).

미, 북 100여개 기관·개인 우편물도 제재

3월 16일 「연합뉴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하여 미국의 우정공사(USPS)가 북한의 노동당 39호실을 비롯한 기관·개인 주소 100여곳으로의 우편물 배달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함.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배달금지 대상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을 비롯한 북한 정부기관에서부터 무역회사, 은행, 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 원자력총국의 리제선 총국장, 북한 무기밀매 거래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윤호진 등이 배달금지 목록에 들어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16).

러선시 부위원장, 중 지린성 경험 논의

3월 18일 「연합뉴스」는 「지린일보」를 인용하여 황철남 북한 러선시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중국 지린성을 방문, 왕루린 성장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 왕 성장은 “‘창지투 개방 선도구’ 개발 계획에 따라 지린-훈춘 여객철도가 착공되는 등 지린성의 기반시설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는 양측의 변경 무역과 경제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황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린성과의 경제 합작과 교역 증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지린일보」가 전했다. 「연합뉴스」는 보도, 대북 전문가들은 황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중국의 라진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 운항 본격화와 투먼-청진 해상 항로의 연내 개통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가 중국 상무부와 라선특구 5개년 합작개발 계획에 합의한데 따른 후속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18).

북, 대EU수출 전년대비 2배 성장

3월 22일 「연합뉴스」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 북한이 지난해 네덜란드에 5,500만유로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대(對)유럽연합(EU) 수출액이 전년대비 배 넘게 늘어났다고 보도. EU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 가 최근 발표한 ‘2010년 대북한 교역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EU내 27개국간 교역액은 2009년보다 43%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북한의 대 EU 수출액이 2009년 보다 2배 넘게 늘어난 데 따른 것” 이라며 “작년에 북한이 EU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 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2).

지린성, 동남아·변경지역 국제상품투자협력 전람회 추진

3월 23일 「연합뉴스」는 「지린일보」 보도를 인용하여 다음 달 창춘에서 한국과 북한 등 동남아국가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동남아·변경지역 국제상품투자협력전람회’ 가 열린다고 보도. 이번 박람회는 8천평방미터 규모의 전시장에 ▲동남아 상품 전시관 ▲변경지역 상품 전시관 ▲대만 상품 전시관 등으로 나뉘어 300여개의 부스가 설치·운영

되고 국내외 기업과 무역업자 1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상품 전시·판매는 물론 참가 업체간 투자와 경제 협력 논의도 이루어진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중국내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전람회 명칭에 ‘변경지역’ 을 사용하고, 변경지역 상품 전시관을 별도 운영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번 전람회는 지린성이 최근 들어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선 북한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또한 창춘시 무역협회가 오는 5월 개최되는 제14차 봄철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참가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협회는 최근 평양전람회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시장을 개척할 좋은 기회라며 현지 기업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3).

남북경협

개성공단 월 생산액 3천만달러 회복

3월 20일 「연합뉴스」는 개성공단 월 생산액이 지난해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3천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1월 개성공단 생산액은 3,105만달러를 기록해 작년 12월의 2,909만달러보다 6.7% 증가하였으며, 개성공단 월 생산액이 3천만달러를 웃돈 것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는 천안함 격침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가 금지되고 있지만 북측 근로자들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따라 신변안전을 이유로 개성공단 남측 체류인원을 현재 하루 500여명 선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20).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첫 지급

3월 23일 「연합뉴스」는 2004년 남북경협보험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첫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하고 2008년부터 개성공단 협동화 공장에 공동투자를 해왔던 6개 기업은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24 조치로 공장 건축에 차질을 빚었다며 지난해 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심의를 통해 ‘5.24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기업에 대해 보험금 43억2,800만원 등 총 4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3).

지난해 남북교역, 북중교역 절반 수준

3월 23일 「연합뉴스」는 23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10년 남북교역·북중교역 동향 비교’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북중교역액의 절반 수준으로 전년과 비교해 비중이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도.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우리나라의 남북교역액은 북중교역액의 55% 수준이었고, 전년도 연간 비중인 64%보다 9%포인트 떨어졌으며 이는 남북교역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북중교역액은 전월과 비교해 계속 증가한 반면 남북교역액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3).

북 주민 27명, 남하 50일만에 송환

3월 28일 「연합뉴스」는 지난달 5일 서해 상에서 표류해 남하한 북한 주민 27명이 27일 오후 북측으로 송환됐다고 보도. 북한 주민 27명은 28일 낮 12시 55분께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상에서 자신들이 표류 때 타고 내려온 선박 편으로 북측으로 귀환하였으며, 송환 당시 북측에서는 경비정 한 척이 NLL 인근까지 나와 북측 주민들의 선박을 인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북한 주민 31명은 지난달 5일 연평도 인근 서해 NLL을 넘어왔으며, 31명 가운데 이날 송환된 27명은 북으로의 귀환, 나머지 4명은 귀순을 결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27명은 지난달 5일 남하한 지 50일만에 북측으로 돌아갔으며, 정부는 이들을 지난 17일 오후 서해 상으로 송환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이 고장 나면서 송환 일정이 열흘이나 미뤄졌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3.28).

방미 북 대표단, “경협 가능성 찾으러 왔다”

3월 28일 「연합뉴스」는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 초청으로 방미중인 북한 경제대표단 일행이 27일 오후(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뉴욕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보도. 북한 대표단 중 한 명은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우리는 경제 고찰단이다. 우리와 미국 사이의 경제협조,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 왔다” 고 밝혔으며, 북미 양측 모두 “자본주의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 북측 경제 관료들일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그러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방북, 유엔의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 필요성 등이 거론되는 와중에 이들의 방문이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 공부’가 목적인지, 또는 이들의 말대로 ‘북미간의 경제협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28).

국민 63%, 대북 쌀 지원 반대

3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겨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29일 보도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62.7%가 북한에 쌀을 ‘지원해선 안 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대북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보낸 물자가 군대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이에 유엔은 24일, 북한 주민 6백만 명 이상이 긴급 식량지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43만 톤의 국제적인 지원을 권고한 바 있으나 한국의 통일부는 28일 이와 관련 “현재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전문가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처럼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덧붙임(「자유아시아방송(RFA)」, 3.29).

남북 전문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협의

3월 29일 「연합뉴스」는 29일 남북의 전문가들이 마주 앉아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도. 전문가들은 일본 대지진 시점에 맞춰 북한 측이 내민 백두산 화산 협의 카드를 통해, 6자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이나 다름없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전문가에 의하면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이 ‘백두산 화산 협의’를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김 위원장의 이름이 붙은 백두산의 정일봉에 새해 첫 아침이나 김 위원장의 생일에 여러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거듭하는 등 북한이 '성지화' 하는 백두산에 대해 폭발 개연성을 시사하며 공동연구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이 자칫 백두산으로 상징되는 체제 정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화산 공동연구를 제안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남북관계 선결 요구에 부응하고자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9).

자료정리 : 이원경